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시대 소명과 공동체자유주의의 과제

[발제자]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일 시] 2020년 06월 25일(목) 오전 10시

▶ 온라인 You Tube 영상



☒ 문자 후원

#7079-4545

제343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자유와 확산'과 '공동체 가치 진작'을 시대의 소명으로 삼고 있다. 자유와 확산을 통한 한반도 통일과 공동체를 위해 배려·절제하는 공민의식의 함양,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과 반목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이 중요한 소명이다.

- 공동체자유주의의 지향점은 법치, 예치, 덕치가 잘 정착된 문명국가의 건설과 ‘일하는 양부모 가정’이 이뤄지는 사회다. 이는 가정이 평안하고 생계에 지장이 없으며 자녀와 부모 등 구성원들이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 정책기조는 문명사회의 가치, 표준을 수용하고 창출하는 것이며 역사와 현실을 존중하고 질서 있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 개방 및 공유를 촉진하는 것이다. 방향은 사회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양자가 경합하면서 정반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사회적 보수주의는 정치의 지향점으로 인권, 공동체, 정통 종교와 도덕 시민사회, 공화주의를 강조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목표에 이르는 경로이자 수단으로 법치, 사유재산권, 자생적 질서와 시장경제를 강조한다.
- 공동체자유주의 실현의 핵심과제는 실체민주주의의 구현, 상생의 시장경제, 홍익인간의 교육·복지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 같은 기조와 과제를 바탕으로 공동체자유주의와 부합하는 정책의제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천착하며 공민교육과 정치 지도자 양성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 ◆ 시대의 소명

### 가. 자유의 확산

- ◆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문에 천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 민주국가와 비교하면 갈 길이 멀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
- ◆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났으나 북한은 아직도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주민들은 압제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자유의 확산을 통한 북한체제의 정상화와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다.
- ◆ 오늘날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국가가 민간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가주의와 ‘큰 정부’의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

### 나. 공동체 가치 진작

- ◆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이에 더해진 국민의 폭민주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위해 배려·절제하는 공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 ◆ 지역 간, 세대 간, 빈부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 질서가 심각하다. 이것을 아우르고 편 가르기를 지양하는 국민통합이 중요한 소명이다.

## ◆ 공동체자유주의의 과제

### 가. 지향점

- ◆ 법치, 예치, 덕치가 잘 정착된 문명국가가 건설되어야 한다. 가장 낮은 길로서의 법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엄정히 집행되어야 한다. 중간 길의 예치는 법적으로

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신뢰, 승복, 감사, 염치, 경청, 존중의 호혜 문화를 고양하는 것이며 거짓말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이다. 높은 길의 덕치란 차원이 높은 양보와 헌신, 응원하는 문화와 기부 및 봉사가 활성화된 사회이다. 국가를 넘어 북한의 인권, 평화유지군, ODA 등과 같이 지구촌의 난제에 관심을 갖고 기여하는 것이다.

- ◆ 개인과 국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으로써 가정도 중요하다. 개인으로서는 국가적 차원보다 가정이 평안하고 생계에 지장이 없으며 자녀와 부모 등 구성원들이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일하는 양부모 가정’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나. 정책기조

- ◆ 문명사회의 가치, 표준을 수용하고 창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권, 언론의 자유, 권력이나 다수결 및 여론 관행 속에서도 주권이나 소신을 지키는 비지배(非支配) 자유가 포함된다.
- ◆ 역사와 현실을 존중하고 질서 있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등 질서 있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원리주의, 극단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개방, 소통, 공존의 협치로 국민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 ◆ 정부보다는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 개방 및 공유를 촉진해야 한다. 기회를 확대하고 패자, 약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호하되 그들이 자조·자립하도록 돕는 유인 체계의 규범 확립이 필요하다.
- ◆ 사회적 보수주의는 정치 지향점으로 인권, 가족, 지역공동체, 국가, 정통 종교와 도덕 시민사회, 공화주의를 강조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목표에 이르는 경로이자 수단으로 법치, 사유재산권, 자생적 질서와 시장경제를 강조한다. 사회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양자가 경합하여 정반합을 이루는 길로 나가야 한다.

## 다. 핵심과제

### (1) 실체민주주의

- ◆ 실체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관용, 절제, 숙고, 협치 규범의 정착이다. 표면 의식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가’가 있어야 실체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
- ◆ 정치에서 관용과 절제가 실현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당의 주요 핵심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소요와 조달방안을 선관위에 사전 등록하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

도록 하여 선출직은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하에 독선과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 (2) 상생의 시장경제

- ◆ 선진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힘이 더 커져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정부가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제 자유화를 통해 시장의 힘을 복원해야 한다. 가격통제를 최소화하고 재정에 의존하는 관제 경제와 보모국가를 탈피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 면허, 감독, 평가 등의 간여를 줄이고 각 직역 단체에 부여한 기득권과 지대도 축소해야 한다.
- ◆ 노사관계가 중요하나 현재는 노조의 영향력이 여러 지표상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사관계는 자율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노조에 편향된 방향으로 정립되어 있다. 양측이 자유를 갖고 동등한 지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대등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규칙 및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아파트 분양 관련 규제는 분양을 받은 사람이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이 불로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 시세대로 분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 ◆ 개방과 공유의 산/학/연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제한하는 강행적 규제보다는 시장과 공동체에 친화적인 규제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홍익인간 교육/복지

- ◆ ‘일하는 양부모 가정’은 개인과 공동체,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핵심고리다. 교육·고용·복지가 생애주기에 연결되도록 적극적인 노동 시장정책을 펼쳐야 한다.
- ◆ 유아 시절부터 도덕과 인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자아가 형성되도록 돕고 일반교육과 더불어 직업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 ◆ ‘일하는 복지’를 촉진하고 중첩된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최근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형태가 늘고 있다. 이러한 복지함정에 빠지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적기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갖춰야 한다.
- ◆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 같은 기조와 과제를 바탕으로 공동체자유주의와 부합하는 정책의제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천착하며 공민교육과 정치 지도자 양성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한 통 2,000원)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